

“정부 지나친 개입, 기업 자율성 침해… 시장 혼란 가중” 지적

통신비 인하 빛과 그림자

이통3사, 공시지원금 확대

SKT, 5G 지원금 48만9000원 상향
KT, 월 13만원 요금제 48만원 확대
LGU+, 지난 인상 이어 한번 더 단행

정부의 가계통신비 인하 압박으로 이동통신사들이 저가 요금제 출시는 물론 공시지원금까지 2배 가량 올렸다. 하지만 정부의 지나친 개입이 시장 혼란을 가중시킨다는 지적이 나온다. 공시지원금을 높여도 통신비 인하를 체감하기 어려운 것은 물론, 통신산업 수익성과 알뜰폰 업계의 경쟁력 또한 하락한다는 분석이다. 이에 따라 총선을 앞두고 유권자 표심 얻기 위한 정책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6일 업계에 따르면 통신3사는 이날 ‘갤럭시S24’ 시리즈의 공시지원금을 최대 50만원으로 인상했다. 통신3사별 공시지원금은 SK텔레콤 25만~48만9000원, KT 16만5000~48만원, LG유플러스 23만4000~50만원이다.

앞서 이통 3사는 갤럭시S24 사전 예약이 끝난 직후 최대 20만원 초반대의 공시지원금을 예고했다. 하지만 지난 2일 LG유플러스가 최대 45만원으로 대폭 확대했다. 그러자 뒤이어 SKT, KT도 공시지원금 확대에 나섰다.

SKT는 5세대 이동통신(5G) 기준 20



갤럭시 S24 시리즈.

/뉴시스

만원 수준이던 최대 공시지원금을 48만 9000원까지 늘렸고, KT 역시 월 13만원짜리 ‘5G 초이스 프리미엄’ 요금제의 공시지원금을 기존 24만원에서 48만원으로 확대했다.

LG유플러스는 지난 2일 공시지원금을 확대한 데 이어 또 한 번의 인상을 단행했다. 1차 인상 당시 45만원 수준이었던 월 13만원짜리 ‘5G 시그니처’ 요금제의 공시지원금은 6일 기준 50만원이다. 여기에 대리점에서 추가로 제공 가능한 합법 보조금(공시 지원금의 15%)까지 고려하면 최대 57만5000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이번 지원금 인상을 두고 정부의 정책적 압박이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나온다. 앞서 윤 대통령이 단통법 폐지 이전이라도 단말기 가격이 실질적으로

인하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라고 지시하자, 방송통신위원회가 이통 3사 임원을 소환해 지원금을 올려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단통법 폐지부터 현실화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단통법 폐지는 정부가 시장가격에 개입하는 대신 업체 간 경쟁을 촉발시켜 소비자의 부담을 낮추는 방법이다.

문제는 단통법 폐지가 시행되기 어렵다는 점이다. 국회 입법 사항이라 21대 국회에서 법 개정이 되지 않으면 4월 총선 후 22대 국회로 논의가 넘어가게 된다. 이해관계자 간 입장 차가 첨예한 만큼 언제 단통법 폐지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처리할 수 있을지 불투명하다. 이에 일각에서는 총선을 앞두고 보여주기가 정책으로 변질될 것을 우려

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다만, 단통법이 폐지될 경우 통신사 간의 보조금 경쟁이 다시 불붙어 소비자 부담이 지금보다 싼 가격에 휴대전화를 살 수 있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최상위 기준 단말기 가격이 200만원을 넘어서고, 가계의 월평균 통신비 지출액이 13만원을 초과한 상황에서 적지 않은 혜택이 예상된다.

또한 현재까지는 공시지원금을 높여도 선택약정이 더 유리하다는 점도 문제다. 50만원이 넘는 공시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월 12만~13만원 수준의 고가 요금제를 택해야 하는데, 이 경우 요금할인을 선택하는 것이 더 할인폭이 높다. SK텔레콤의 경우 최대 공시지원금이 56만2300원이지만, 요금할인은 75만1080원 받을 수 있다. KT와 LG유플러스의 최대 공시지원금은 각각 55만2000원, 57만5000원이지만 선택약정으로는 78만원 할인이 가능하다.

이밖에도 단통법이 폐지되면 알뜰폰 업계의 경쟁력 저하도 우려된다. 이통사의 보조금 경쟁이 과열되면 상대적으로 자금력이 부족한 알뜰폰 사업자들은 사실상 대응이 불가하기 때문이다.

이에 업계에서는 정부의 무리한 시장 개입이 오히려 생태계를 해칠 수 있다고 우려한다. 정부가 가계통신비를 줄이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알뜰폰 시장의 활성화를 내세운 만큼, 관련 보완책도 세워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구남영 기자 koogija_tea@metroseoul.co.kr

>> 1면 ‘저가폰 늘리는 제조사’서 계속

방통위, 애플도 찾아 보조금 상향 기대감

삼성전자가 방통위 요구를 수용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국내 시장에서는 보급형 판매량이 많지 않은데다가, 브랜드 이미지를 훼손하는 주요 요인으로 꼽히면서 오히려 축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M시리즈는 국내에서는 사용하기 어려울 만큼 성능이 낮은 편으로 알려졌다. 글로벌 시장을 대상으로 하는 만큼 국내에서만 단말기를 저렴하게 팔 수도 없다.

일각에서는 통신 요금 부담을 줄여야 하는 명분이 없다는 지적까지 나온다. GDP 등 여러 상황을 감안하면 국내 통신 요금이 비싸다고 하기 어렵다는 이유다. 방통위도 통신 요금이 상대적으로 높다고 보는 것은 아니며, 국민 부담을 줄이는데 초점을 맞춘 조치라고 설명했다.

방통위는 앞으로도 단말기 제조사를 대상으로 부담 경감 요청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한 매체에 따르면 방통위는 지난해에 이어 이날 오후에도 애플코리아 임원을 만나 지원금 상향을 요청했다. 애플은 지난해 삼성전자와 함께 방통위를 만나 부담 경감 요청을 받았지만 그동안 그렇다할 조치를 하지 않아왔다. 삼성전자 갤럭시S24가 출시 직후 보조금을 상향하게 된 만큼, 애플도 동참할 수 있다는 기대가 나온다.

/김재용 기자 juk@

“SW 불법복제 제보·접수 연간 1000여건”

여전히 횡행, 지난해 피해액 1000억
일반 사무용SW 273건 가장 많아
업종별, 제조·화학업종 전체 27%

IT업계의 골칫덩이 불법복제가 여전히 횡행하며 지난해 피해액이 1000억원대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심지어 지난 2020년 불법복제 SW의 유통통로로 지목돼 철폐를 맞았던 중국 오픈마켓이 여전히 유통통로로 활약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6일 한국소프트웨어저작권협회가 불법복제 SW 제보서비스 ‘엔젤(Angel)’의 분석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 지난해 대비 19% 정도 접수 건수가 줄어들면서 2021년부터 2년 연속 감소 추세가 나타났다. 그러나 여전히 SW 저작권 침해 피해금액은 전체 109억여 원을 기록하며 전년 대비 123%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제보·접수된 전체 956건의 불법복제 프로그램은 일반 사무용SW가 273건(29%)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설계용 SW 242건(25%), 운영체제 187건(20%), 그래픽 SW 130건(14%), 기타SW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업종별로는 제조·화학업종이 전체의 27%인 139건으로 가장 많았고, 뒤이어 정보통신 73건(14%), 기계·전자 32건(6%), 건설·교통 98건(19%)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협회는 제조·화학업종에서 불법복제

이용이 다수 확인된 이유로 ▲경기침체 및 인력부족으로 인한 SW 저작권 관리 및 점검 노력 부족 ▲SW 개발사 라이선스 판매 방식의 변화(영구 판매에서 최근 구독 형태로 전환 추세) 등으로 분석했다.

유명한 한국소프트웨어저작권협회 회장은 “저작권사, 개발사 등의 노력과 불법복제 소프트웨어에 대한 사용자들의 인식도 점차 개선되고 있지만, 여전히 열악한 환경에 있는 중소기업과 개인사업자 등을 중심으로 불법 소프트웨어 사용은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이번 협회 발표는 개인이 아닌 기관·기업에 대한 불법복제 SW 사용만을 집계하고 있어 실제 국내에서 개인이 PC에 설치해 사용하는 사례는 포함하지 않는다. 공공기관과 기업의 경우 강도 높은 단속과 개발사의 보안 강화 등 노력으로 매년 단속 건수가 줄어드는 추세다. 그러나 개인의 이용은 집계가 어려운 실정이다. 한국은 지난 1990년대 말 SW/OS 저작권 개념은 제대로 인식되지 않은 채 인터넷이 전래없이 빠른 속도로 보급됐다.

이에 사무용소프트웨어연합(BSA)가 조사한 한국 소프트웨어 불법복제 현황은 2000년 56%, 피해액은 5400억원에 달했다. 같은 기간 전세계 불법 복제율 평균은 38%, 미국 평균은 20%였다. 2000년대까지 SW/OS는 물론 음악과

영화 등 다양한 문화콘텐츠까지 저작권 침해 대상이 되자 소송이 이어지며 국내서 저작권 인식이 점차 자리잡았다.

전문가들은 그럼에도 계속 불법복제 SW 이용이 계속 되는 이유를 기업과 개인의 갈등이라는 인식으로 지목하고, 적발의 어려움 또한 말한다. IT 업계 관계자 A씨는 “열심히 만든 게임이 과거 웹하드에서 발견돼 너무나 허탈했다”며 “사실을 게임 커뮤니티에 호소하자 오히려 유저가 즐겁게 즐기는 게 개발자의 기쁨이라며 다운로드 수가 늘었다”며 경험을 전했다. 그는 “신고를 해도 A에서는 삭제되고 B에서 다시 나타나는 등 나와 작은 중소기업의 힘만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었다”고 덧붙였다. 국내 불법복제 SW 유통 통로를 적발하면 해당 통로가 새로운 곳으로 이동하는 데다 점점 더 은밀해지고 있다. 과거 CD와 웹사이트에서 토렌트, 웹하드 등으로 이동했던 불법복제 SW 유통 경로는 현재 일반적인 오픈마켓에 이르렀다.

지난 2019년 대법원은 오픈마켓을 통한 불법복제 SW 판매에 대해 유죄 판결을 내렸는데, 이를 기점으로 국내 오픈마켓에서의 유통이 급속도로 줄었다. 그러나 곧이어 알리익스프레스로 이동한 불법복제 SW 유통은 현재 중국 최대 쇼핑몰 타오바오에 횡행하고 있다.

/김서현 기자 seoh@

미국반도체협회 “올 두자릿수 성장 전망”

“무역 장벽 완화 돼야”

미국 반도체 업계도 올해 대대적인 회복세를 기대했다. 무역 장벽 완화 바람도 숨기지 않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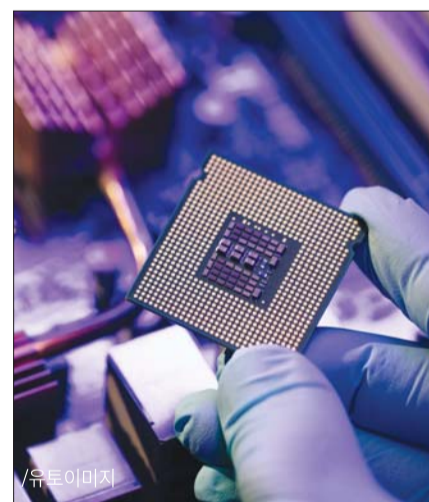
미국반도체산업협회(SIA)는 지난해 전세계 반도체 산업 매출이 5268억 달러였다고 5일(현지시간) 발표했다. 전년(5741억) 대비 8.2% 줄었다.

대신 하반기에는 매출이 증가했다며 반등을 확인했다. 4분기만 보면 1460억 달러 매출로 전년 동기 대비 11.6%, 전년 동기보다도 8.4%나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12월 역시 전달보다 1.5% 많다고 덧붙였다.

지역별로는 지난해 매출로 유럽이 유일하게 4% 성장, 일본(-3.1%)과 미주(-5.2%), 한국을 포함한 아시아 태평양 및 기타(-10.1%) 등이 큰 폭으로 역성장했다. 특히 중국은 -14%로 가장 하락폭이 컸다.

반대로 12월만 보면 중국이 전달 대비 4.7%, 미주가 1.8% 성장했다. 아시아 태평양 및 기타 지역도 0.3% 확대했다. 일본(-2.4%)과 유럽(-3.9%)은 줄었다.

제품별로는 로직이 1785억달러로 가장 규모가 컸고, 메모리는 923억달러로 뒤를 이었다. 자동차 IC가 23.7% 증가한 422억달러, 마이크로컨트롤러 유닛(MCU)도 11.4% 성장한 279억달러를 기록했다.



SIA는 올해에는 두자릿수 이상 성장을 전망했다. 반도체 역할이 확대되면서 장기적으로도 성장을 내다봤다.

존 노이퍼 SIA 사장 겸 최고경영자(CEO)는 “글로벌 반도체 판매는 2023년 초반 부진했으나 하반기에 강하게 반등했다”며 “R&D에 투자하고, 반도체 인력을 강화하고, 무역 장벽을 낮추는 정부 정책을 발전시키면 반도체 산업이 앞으로 수년 동안 계속 성장하고 혁신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제반도체재료장비협회(SEMI)도 최근 세미콘2024에서 올해 반도체 산업 투자릿수 성장을 예상한 바 있다. 2029년까지 반도체 산업 매출이 연평균 9% 성장하며 2030년에는 1조달러 달성도 기대했다.

/김재용 기자 juk@